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기반 다져 낙후 대물림 끊기

광주시·전남도 연구개발 인프라·예산 확보에 사활 건 이유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구개발(R&D) 관련 연구기관 및 시설, 기업 등의 유치에 유독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광주가 그나마 AI(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첨단산업단지 내 포진하고 있는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R&D 시설·인력·예산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전남도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충북 오창에 넘겨줬음에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전공대라는 연구중심대학을 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춰야 제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전남도,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포기 못해” 연말까지 논리 보완해 재도전-지난 5월 전남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충북도는 최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오송-충주 국가산단은 총사업비가 4조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최근 10년 간 전국에 조성된 국가산단 6곳의 면적을 모두 합친 7.4㎢ 보다 규모가 21.4% 크다. 특히 오송(의약)·오창(정보기술)·충주(바이오헬스)·제천(한방)·육천(의료기기)을 연결하는 약 3300만㎡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한전공대 설립·기업 유치

첨단 연구시설 뒷받침 필요

빈익빈 부익부 연구개발 예산

지역 균등 배분 방안 찾아야

와 연계돼 형성될 전망이다. 1조원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미래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전남도가 유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꾸준히 추가 구축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지역 내에서 미래산업을 육성·유치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해줄 최첨단 연구시설이 없으면 관련 연구기관도, 기업도 전남을 찾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오는 12월까지 ▲오창 방사광 가속기(4 GeV)와 성능 차별화 전략 마련 ▲기초연구 등을 통한 10년 후 미래수요 예측 ▲가속기 전문인력 수급 방안 구체화 등을 통해 차세대 대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필요성 등의 논리를 보완해 다시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빛가람공동혁신도시 인근에 배치할 방사광가속기의 구축 사양도 오창보다 큰 6 GeV의 원형 가속기로, 둘레만 1.3km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5월에 조정했다. 전남도는 이를 기초과학 연구

및 에너지·나노 소재, ESS 소재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충청권과 수도권이 독식하는 R&D 예산-광주·전남 미래 경쟁력 상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에 따르면 전남도는 정부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636억원(0.8%)의 연구개발 예산을 받았다. 제주(390억원, 0.1%), 강원(2445억원, 0.7%), 세종(2535억원, 0.8%)이 전남보다 덜 받았으며, 전북만해도 4796억원(1.4%)이 투자됐다. 전남은 지난 2015년 517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571억원, 2017년 514억원, 2018년 389억원, 2019년 645억원 등 지난해에만 반짝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여건은 좀 나았다. 지난 2015년 1787억원, 2016년 1735억원, 2017년 1884억원, 2018년 1830억원, 2019년 2006억원 등으로 같은 기간 모두 9242억원(2.8%)의 연구개발 예산을 얻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대전 15조7877억원(47.5%), 서울 7조1798억원(21.6%), 경기2조6411억원(7.9%) 등은 차원이 다른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국가의 연구개발예산은 독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국책기관, 시설 등을 열악한 지방에 강제로 분산하는 방안 등을 미래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그린금융 관련 on-Air 국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R&D 예산의 매년 증가분을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총리실 직원 1명 코로나 확진 정세균 총리 검체 검사 음성 판정

청사 해당 부서 일시 폐쇄
소속 부서 직원들 자가격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정 총리는 지난주 A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지난주 A국장을 만난 적이 없고, 지난주 수요일(16일) 이후 접촉한 적이 없어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방역 당국에서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전남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하

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 총리가 음성 결과를 받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리실 A국장은 정 총리의 측근으로,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 관리소는 확진자가 발생한 창성동 별관 청사 4층 해당 부서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 소독을 했다. 또 국무총리비서실은 소속 부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은 추가로 현장 조치 및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 직원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론화 속도...추석 전후 각계 회동

이용섭 시장, 각계 간담회
광주시 준비단 구성 나서
전남 시장군수·의회 의장
10월 정기회서 통합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추석을 전후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에서도 사도 통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추석을 기점으로 공론화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시대 정신”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보람 있는 일인 만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사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했

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체인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1일 출범한 사실을 소개하며 “광주·전남 통합은 대세, 시대적 요구이지만 전반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어려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광주 경실련 대표단을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시의회 의장단, 5개 구청장과 각각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광주에서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열기로 해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도 행정 통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10월 3일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이 예정됐으며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제안한 시장, 지사, 민주당 사·도당 위원장간 4차 연석회의도 곧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논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도출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 전문가 특강 등 통합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 모임, 행사 등도 추진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김중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광주·전남 통합 준비단을 구성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사·도 통합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분위기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0월 중 예정된 정기회의에서 사·도 통합 이슈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민 의견 수렴 이전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22명의 기초 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의 시장, 군수가 통합 찬성을 나타낸 점도 긍정적이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유근기 곡성군수는 “사·도가 통합하면 경쟁력이 이

전보다는 커질 것이다. 이슈 제기 등 형식을 떠나 이러한 논의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수도권, 충청권 집중에 대응해 다른 사·도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10월 중 공식에서 개최될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에서 시장, 군수님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은 “주민 수렴 이전에 입장 표명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담양은 광주 인접 지역이라 사·도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10월 중 합평에서 열리는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님들과 의견 교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리산 청정지역!

남원 농·특산품

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NAMWON

SPECIALITY

순향남원
사향의 1번지

남원 사랑어장터
http://www.namwonlove.co.kr